

정부 핵심 사업 유지하고 정책펀드 등 중복예산 삭감

여야 5년만에 법정시한 내 예산안 타결...728조원 규모 유지키로
양당 요구 고르게 반영...민주 “총액 지켜내”·국힘 “방만 편성 삭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내년 예산안 법적 처리 시한인 2일 예산안 처리를 합의했다.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는 5년 만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의 법적 시한 준수와 더불어 국민성장펀드·지역사랑상품권 등 핵심 국정과제 예산을 사수했고, 국민의힘은 인공지능(AI)·정책펀드 등 중복 사업 예산을 감액하고 보훈 예산 확대를 관철해 원안했다는 분석이다.

이날 오전 도출된 합의에 따르면 여야는 정부 원안(728조원 규모) 대비 4조3000억원 수준을 감액하고 그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다.

총액 부분에서도 양당의 요구가 고르게 반영됐다.

민주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분산전력망 산업 육성·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등을 국민의힘은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국가장학금·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에 대한 증액을 각각 합의에 포함했다.

민주당이 가장 공들인 부분은 핵심 국정과제의 ‘원안 사수’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728조 원 규모의 예산 총액을 온전하게 지켜냈다”며 “민주당이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로 협상장을 끝까지 지켜낸 결과”라고 자평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 과제는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전부 지킨 결과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큰 방점을 뒀던 AI 관련 예산은 일부 감액됐지만 사업

자체는 모두 유지됐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사업의 금액을 일부 낮추는 정도”라며 “예컨대 1000개소를 하려던 것을 900개소로 낮추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AI 모빌리티 관련 사업과 분산형 전력망 등에 대한 민주당의 증액 요구가 받아들여졌다면 “자율주행 예산의 경우 정부안에 608억원에서 600억원 이상 대폭 (증액) 반영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체 예산 규모의 순증을 막고 이른바 불필요한 예산을 정리했다는 점을 성과로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중복·과다 편성을 이유로 AI 관련 예산 1조2000억원을 감액하자고 주장해왔고 실제 2064억원을 감액했다.

낮은 실 투자율 등을 근거로 ‘방만 운영’ 문제를 지적해왔던 정책펀드 역시 3000억원가량 감액됐다.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이번 예산은 확장 재정”이라며 “109조원이나 적자 국채 발행을 해 마련한 예산이기에 순증하면 안 된다는 게 기본 생각이었다. 그것이 관철됐다는 게 큰 성과”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간 방만하게 운영돼 온 펀드 예산을 삭감해 정리할 계기를 마련했고 AI 예산의 경우 AI라는 이름으로 산재해 방만해 편성된 것을 정리·삭감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였던 국민성장펀드·지역사랑상품권,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됐다 부활한 특활비에 대한 감액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점을 두고는 “100% 만족하지는 못한다”고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비상계엄 1년 ‘12·3 국회의 밤, 2시간 30분’ 사진전 ‘비상계엄 사태 1년’을 하루 앞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2·3 국회의 밤, 2시간 30분’이라는 주제로 사진전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 정치권 “12·3 계엄은 내란...가담자 전원 처벌해야” 한목소리

‘12·3 불법 계엄’ 1년 성명

‘12·3 불법 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지역 정치권에서 잇따라 성명을 내고 헌정 질서 파괴 세력에 대한 성역 없는 처벌과 진상 규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2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조직적인 국가 폭력으로 규정했다.

시당은 “윤석열 정권이 군 병력을 동원해 입법부를 무력으로 장악하려 했던 시도는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고 비판하며, 지난 1년간 국민의힘의 방관과 사법부의 잇따른 석방 조치를 강하게 성토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시당은 내란 사건을 전담할 ‘특별 재판부’ 설치와 ‘제2차 종합 특검’ 추진을 제시했다.

양부남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은 “5·18 정신이 있었기에 계엄을 막아낼 수 있었다”며 “광주가 앞장서서 내란 세력을 심판하는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광주시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오월 정신

계승과 정치 개혁을 다짐했다.

김주업 진보당 시당위원장은 “사실상 1980년의 광주가 2024년의 대한민국을 구한 것”이라며 내란 가담자에 대한 단호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어 내란 지방선거를 광주 정치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광주 정치의 진보가 사회 대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끌고 개혁의 문을 여는 주춧돌을 놓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재석 60명 안되면 필리버스터 중단...민주, 내일 본회의 처리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조기에 무력화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하면서 정국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 들자, 민주당이 규칙 변경으로 맞불을 놓은 모양새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오는 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진행 도중 본회의장 재석 의원 수가 60명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국회의장이 토론 중지를 선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개정안에는 장시간 이어지는 토론으로 인한 의장단의 체력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의장이 직접 사회를 보기 어려울 때 다른 의원을 지정해 의사 진행을 맡길 수 있는 ‘대리 사회’ 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소수 정당의 유일한 합법적 저항 수단마저 빼앗으려 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4일 본회의 개최 전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해당 법안을 의결한 뒤,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반도체법의 경우 여야 합의 처리가 유력하며, 나머지 법안들은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아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반도체법과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 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문금주, 농어업 세제감면 제도 연장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2일 농어업 분야의 주요 세제감면 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올 해 일몰을 앞둔 두 법안은 농어민의 영농·영어 활동을 뒷받침해 온 각종 세제지원의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4년 연장하는 ‘세제지원 패키지 입법’이다.

농어업은 기후위기, 고령화, 인구감소 등 구조적 변화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제지원은 소득 보전과 지역경제 유지에 필수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영농 기자재, 농어업법인, 농어촌주택, 영농·영어용 시설 등에 적용되는 조세·지방세 감면 특례가 올해 말 일몰될 경우, 농어민의 경영비 부담 증가와 투자 위축 등 현장의 어려움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영농·영어용 기자재, 농어업법인, 관련 개발사업 등에 적용되는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4년 연장해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도 농어촌

주택과 영농·영어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동일하게 4년 연장함으로써 현장의 세제 부담을 완화하도록 설계됐다.

문 의원은 “농어업 세제지원은 혜택이 아니라, 우리 산업과 지역 공동체가 버티는 최소한의 기반”이라며 “일몰로 제도가 끊기면 농어민이 감당해야 할 비용은 단순한 세금 증가가 아니라, 영농을 지속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MD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창 광주시 서구 서창2길3(서창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